

D18-13 / 1989. 1

1988年度

# 農民이 바라는 農政

現地通信員의 農政通信報告 要旨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 머 리 말

이 資料는 當研究院이 農政에 관한 일반 農民들의 輿論을 調査·蒐集 할 목적으로 1978년부터 農村거주 農民을 대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現地通信員이 1988년 한해 동안에 편지형식으로 보내 온 農政 및 農村·農業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건의 사항들을 要約·整理한 것이다.

이들 現地通信員 개개인이 보내 온 農政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建議는 그들 입장을 개진한 극히 단편적이고 皮相的인 내용도 있고 다소 중복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中心的인 비판이나 일방적인 呼訴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되도록 그 뜻을 살려 정리함으로써 그들 農民의 視角과 입장을 통해 農촌현실과 사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왜냐하면 우리의 農政 및 그 研究의 제1차적인 관심대상은 農村·農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촌을 農民의 삶의 공간적 토대라고 볼 때 農政 및 農村·農業문제에 대한 農民의 意見이나 반응 내지 輿論은 우리의 農村社會·經濟研究에 있어서 주요한 收斂領域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粗放하고 非體系的이지만, 1987년에 이어 일곱번째로 이 資料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88.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빈 면

# 目 次

## 머 리 말

概 說 .....	1
「農政建議」사항 類型別 分類 .....	7
1. 秋·夏穀收買 .....	8
2. 營農資材 .....	12
1) 肥 料 .....	12
2) 農 藥 .....	12
3) 農機械 .....	13
4) 種 子 .....	17
5) 其 他 .....	18
3. 農畜產物價格保障 .....	19
4. 生產基盤造成 .....	21
5. 營農資金·農家負債 .....	26
6. 農村社會·營農後繼者 .....	30
7. 農地稅·農地購入資金 .....	33
8. 畜 產 .....	37
9. 林 業 .....	40
10. 農村福祉·文化施設 .....	41
11. 農畜產物 輸入 .....	45
12. 特作·蠶業 .....	47
13. 農工團地 .....	51
14. 農漁家放送·營農教育 .....	52
15. 農業 및 각종 災害保險 .....	54
16. 其 他 .....	56
〈附錄 1〉 「現地通信員」現況 .....	60

빈

면

## 概 說

이 資料는 農村에 거주하는 本院 現地通信員들이 1988년 한 해동안  
직접 農事를 지으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農業·農村·農政施策」문제에  
대한 意見 및 建議사항으로 보내 온 334件의 通信을 要約, 分類·整理  
한 것이다.

農民들이 農政에 대해 바라고 있는 건의내용은 秋·夏穀收買문제를  
비롯한 營農資材, 營農資金, 農家負債, 農地稅·農地購入資金, 畜產, 農  
村社會, 農村福祉, 生產基盤造成, 特作 등이主流를 이루었다.

현지통신원이 보내 온 主要農政에 대한 건의사항은 肥料·農藥·農機  
械·種子 등 「營農資材」에 관한 사항이 59건(17.7%), 「農村福祉·文化  
施設」에 관한 사항이 32건(9.6%), 「生產基盤造成」에 관한 사항이 30건  
(9.0%), 「秋·夏穀收買」에 관한 사항이 28건(8.4%), 「農地稅·農地購入  
資金」에 관한 사항이 27건(7.8%)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營農資金·農家負債」, 「特作·蠶業」, 「畜產」, 「農村社會·營  
農後繼者」, 「農畜產物價格 保障」 등 농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건  
의가 있었다. 각 분야별로 정리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 秋穀 및 夏穀收買

추곡수매와 관련 수매량을 희망수매량보다 적게 배정하였을 뿐만 아  
니라 수매도 3회 정도의 계획수매로 인해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아 각종  
자금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른바 계획수매로 보관관리·운반비  
부담이 늘어나 일시전량수매로 전환해 주고 대금은 나누어 월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수매량, 수매가격, 수매방법 등은 수확하기  
전에 예시해야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올해는 수매가  
격이 결정되지 않고 14%의 잠정인상가격으로 수매해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인 수매가격의 20% 정도 인상을 요구했다.

## 營農資材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 영농자재의 공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肥料** : 농협을 통해 비료를 언제든지 현금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바란다. 금년에는 보리 전용 복합비료가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아 보리파종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토의 산성화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인 석회·규산질비료가 제때에 공급이 안된 점을 감안해 일반 비료와 같이 단위농협에서 공급하여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랬다.

**農藥** : 농약이 품귀시는 일부 일반시중농약상들은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며 농약병이나 포장지에 소비자가격과 출고가격을 표기해 농민들이 구입하는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고 성분이 거의 같으면서도 비슷비슷한 농약이 많아 구입과 사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농약종류를 줄여 주길 요구했다.

**農機械** : 농촌 일손부족해소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민들이 농기계에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기계의 공급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리센타의 부품가격이 비싸고 부품이 없어 수리하는데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이 특히 많았었다. 콤바인·이앙기는 연중 사용기간이 짧은데다 중농 이하 농가는 구입을 못하는 형편이었다며, 각종 농기계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길 바랬으며,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도 기계화영농단에 주는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고 영농단을 조성할 때에도 단지에서 필요한 농기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랬다.

**種子** :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보급종 감자, 일반계인 신광벼, 호백종자가 농가가 신청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 종자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파종에 차질을 빚었다며 앞으로는 농가신청 전량을 공급해 주길 요구했다.

**기타** : 시설원예에 필요한 농업용 파이프가 생산회사의 공급중단으로 하우스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석유를 비롯한 각종 유류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PP마대값은 지난 해보다 해당 24원이 올랐다며 지난 해 가격으로 환원하여 공급해 주길 바랬다.

## 農畜產物 價格保障

고추·마늘·양파·배추 등 각종 농산물 가격불안정 때문에 작목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부면적의 향조사를 실시, 재배면적이 과잉시에는 파종하기 전에 통제조절하여 가격폭락이 없도록 해주고 계약재배나 가격보장제도를 마련해 주길 요망했다.

## 生產基盤造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영농기계화,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지역이 평야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산간지역의 농경지가 아직도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많아 기계화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하천에 추입보, 수리시설과 소형기계관정 설치를 바라고 있었으며, 개량곳간의 송풍기에 사용되는 전기도 농업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한해지역에 영구대여해 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 營農資金 · 農家負債

영농자금의 배정액이 소요량에 비해 너무 적어 영농비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부채만 지게 된다는 의견이 많다. 영농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조기에 냉출해 주고 상환기간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해 1년으로 해주길 요망했다.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해주었으나 일부 채무자는 지원자금은 받기만 하고 신고된 사채를 갚지 않아 부채만 누증되는 결과만 빚었으며, 농가부채탕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일부 농민들이 부채를 갚으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해 일부 농민은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 農村社會 · 營農後繼者

단위조합장은 총대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총대선거 때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행해지고 있다. 각종 급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여론이고 보면 급여를 감액하든지 명예직으로 하고 선출은 구성원인 관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하루 빨리 개정되었으면 한다. 한편 전답이 공병·폐비닐 등으로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하천마저 오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시원을 두어 오염을 방지 했으면 한다. 영농후계자의 경우 상당 수가 영농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랬다.

## 農地稅 · 農地購入資金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책정치 말고 기초공제외에 가족수·교육비 등을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간에 농지 매매시는 가능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신고제와 허가제의 철회가 요망된다.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줘 대부분 농민들은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지원자는 많고 지원액은 적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액을 확대해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망했다.

## 畜產

소값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생축값 하락폭 만큼 정육점 판매가격도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실시가 요망된다. 정부차원에서 쇠고기수입이 절실하다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육우출하시 장려금 지급, 배합사료가격 인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83·84년 도입육우와 한우입식을 받아 상환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10년 정도의 입식자금의 상환연기 혜택이 요망된다. 유지방 함량 3.4% 기준의 원유값이 지난 1985년 5월에 조정한 것으로 그동안 사료값·인건비·

기자재의 상승을 감안, 원유값의 25% 정도 인상을 요망했다.

## 農村福祉 · 文化施設

농어촌지역도 자동전화로 바뀌어 편리는 해졌으나 전화가 없는 농가는 이전보다 불편이 많다며 마을단위에 자동 공중전화 설치를 요망했다. 올 해부터 농어촌지역까지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으나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세대당 가족수, 재산, 소득기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많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농가는 반납하는 사례까지 빚었다. 부담이 되는 농가를 위해서는 월별, 분기별, 반년납별 등으로 구분해 희망에 따라 납부했으면 한다. 보험료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해주고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농어민도 아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망했다.

## 農畜產物 輸入

농축수산물의 수입품목을 결정할 때는 협의기구(가칭)를 설치해 농어민이 다행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절실히며, 엽연초 생산농가는 양담배 수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입자유화 조치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교역으로 대추·표고버섯·황기 등이 다량 수입되면서 판로가 막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며 국내산으로 대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해 주길 요망했다.

## 特作 · 蠶業

정부가 13만톤 이상의 고추생산물량을 파악하고도 농협의 고추 수매 물량이 2만톤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입을 모았으며, 이로 인해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농민들이 일부 중간수집상들에게 6백 g(근당)상품을 1천1백원~1천5백원 정도의 헐값에 방매해야 했었다. 농가가 원하지 않은 뽕나무 묘목이 각리·동단위로 배정되어 그대로 방치된 사례를 빚었다.

## 農漁家放送 · 營農教育

농축산물의 시세동향을 방송이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길 바랬고, 농번기 만이라도 일기예보 방송을 좀더 자주해 주길 요망했다. 면단위의 행정도 기관마다 유사한 담당부서가 많고 중복되어 재원낭비가 되고 있다며 농촌지소, 단위농협, 면사무소의 행정일원화를 요망했다.

## 農業 및 各種 災害保險

태풍 · 한해 · 냉해 · 농기계 사용 부주의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의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대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큰 피해가 아니면 전혀 보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망했다.

## 其 他

토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마련, 농촌주택자금의 금리 3%선으로 인하, 리 · 동장 처우개선, 농토지목변경의 현황조사 실시, 농촌지소를 합병치 말고 직원 총원, 단위농협의 지역금융점포의 온라인 설치, 농업용 면세유 확대 등의 요망이 있었다.

「農政建議」事項 類型別 分類

번호	도 별 유형별	합 계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	秋 · 夏 穀 收 買	28	1	2	2	5	4	7	4	3	—
2	營 農 資 材 : 肥 料	3	—	—	—	—	1	—	—	1	1
	農 藥	10	—	—	1	5	1	1	2	—	—
	農 機 械	31	2	5	3	2	4	5	7	3	—
	種 子	8	—	4	1	2	1	—	—	—	—
	其 他	7	—	—	—	2	—	2	—	1	2
3	農畜產物價格保障	11	—	1	2	1	2	2	1	2	—
4	生 產 基 盤 造 成	30	4	4	2	8	3	2	2	3	2
5	營 農 資 金 · 農 家 負 債	26	3	5	4	3	2	3	2	2	2
6	農 村 社 會 · 營 農 後 繼 者	16	4	3	1	1	—	4	—	3	—
7	農 地 稅 · 農 地 購 入 資 金	27	6	4	2	3	2	4	2	3	1
8	畜 產	19	1	2	2	4	—	3	2	4	1
9	林 業	3	—	—	1	—	—	1	—	1	—
10	農 村 福 祉 · 文 化 施 設	32	4	2	3	3	4	7	6	3	—
11	農 畜 產 物 輸 入	9	—	1	1	4	—	—	3	—	—
12	特 作 · 蠶 業	25	2	4	5	3	—	4	7	—	—
13	農 工 團 地	3	1	—	1	1	—	—	—	—	—
14	農 漁 家 放 送 · 營 農 教 育	6	1	2	—	2	—	—	—	1	—
15	農 業 및 각종 災 害 保 险	6	—	2	—	1	—	—	2	1	—
16	其 他	34	5	2	6	2	3	6	4	5	1
계		334	34	43	37	52	27	51	44	36	10

## 1. 秋 · 夏穀收買

- 추곡수매가격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수매량을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를 쳐사라 아니할 수 없다.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수매가격은 수확전에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충남 아산군 배방면 북수리, 성 윤모)

- 추곡수매를 할당제가 아닌 전량수매제로 하고 수매일자별로 출하량을 배정하여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지 못할까 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신품종 벼 추수를 9월 20일경에 끝내고 수매일시만 기다리고 있다. 선수매 후 수매가가 결정이 되더라도 빨리 수매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영암군 서토면 화송리, 김 상학)

- 조생종 벼는 추수가 이미 끝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햅곡을 헐값으로 시중에 출하하고 있다. 추곡수매가를 앞당겨 예시해 생산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 3, 여 상노)

- 영양군 북부산간지역의 추수는 남부지방에 비해 1개월이 빠른 10월 초에 추수가 끝나 수매시기와 1개월간의 시차를 보여 농자금을 갚기 위해 헐값에 시중출하를 하고 있다. 가격예시제와 함께 수매시기를 앞당겨 주었으면 한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 조 춘석)

■ 추곡수매를 시작한지도 17일이나 지났는 데도 아직까지 14% 인상안의 잠정가로 수매에 응하고 있다. 그나마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들이는 이른바 계획수매로 인해 보관관리·운반비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일시수매로 전환해 주고 대금은 나누어 월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전북 김제군 금구면 청운리, 송 원청)

(전북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김 성규)

■ 쌀값 10% 인상에 다른 물가는 0.4%가 인상된다고 한다. 1인당 쌀의 1일 소비량이 커피 1잔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추곡수매가격 인상폭에 따른 각계의견은 경제기획원 9%, 농림수산부 12%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여론을 묻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생산비가 보상되는 선인 20% 정도 인상은 되어야 한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 김 용구)

■ 1988년산 추곡수매가를 양곡유통위원회에서 17~18%의 인상을 견의한 것을 경제기획원이 8~9%로 제시한 것은 농촌경제도 파악 못할 뿐 아니라 농가부채정리에도 도움이 않된다. 20% 정도의 인상이 요망된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관마리, 설 남신)

■ 올 추곡수매가격 인상은 올 해 물가상승률과 영농자재 10%, 인건비 30% 인상된 점을 감안해 실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 20%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정 환기)

■ 쌀 80kg들이 1가마를 생산하는데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기타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해 경비가 4~5만원선이며 토지이용비, 수매시 조제비를 포함하면 10만원선인 20%의 인상이 요망되며 수매가를 결정할 때 농민이 참여하는 심의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충남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이 병항)

■ 올 추곡수매가격은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제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 정도 인상해 80kg 가마당 최소한 10만원 정도로 해 주고 농가 희망량 전량의 일괄현금수매가 요망된다.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 985, 윤 석봉)

■ 올 추곡수매값이 80kg 가마당 최소한 지난 해 7만6천여원(1등급)보다 25%가 오른 9만5천여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김 예상)

■ 중북부에 위치한 양구지방은 10월 10일 현재 80% 이상 벼수확을 끝내고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 늦어지고 있어 대부분 농가는 시중양곡상의 농간에 의해 80kg 가마당 8만5천~8만2천원의 혈값에 팔고 있는 실정이다. 추수하기 전에 추곡수매가를 발표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 1리, 전 병열)

■ 금년산 추곡수매가격은 영농자금을 비롯한 각종 대출자금의 상환을 위한 목돈마련과 어려운 농촌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어도 지난 해 가격 기준 15% 이상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경북 군위군 효경면 증구 2, 이 제화)

■ 대술면 상항리의 경우는 추곡수매 배정량이 부족해 40% 이상을 타군에 위탁수매하고 있다. 식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매량을 배정해 주기 바란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김 영복)

■ 지도읍 자동리는 10월 중순에 당국의 수매계획이 모두 끝났다. 전량 수매하겠다는 당국의 발표만을 믿고 성실하게 수매량을 신청했으나 사전홍보계통을 통한 이해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청량의 20%를 삭감했다. 수매가격 인상률의 조기매듭과 함께 추가수매를 해주었으

면 한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김태평)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윤 교승)

■ 양곡은 정부가 수매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농민들은 알고 있다. 한강찰벼는 농협 단독수매사업이라며 일정 계획수매량외는 수매를 받지 않고 있다. 수매를 할 목적으로 한강찰벼를 재배한 농민들이 수매를 못해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문 길선)

(경남 김해군 가락면 죽림리, 박 수윤)

■ 추곡수매가는 매년 10월15일 이내로 결정해 주고, 우량볍씨 종자가 농가희망전량이 공급되지 않아 종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 김제군 백구면 상동리, 유 태종)

■ 추곡도 보리처럼 수매가격, 수매량의 예시와 농가 희망전량을 수매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박 장열)

■ 단위농협과 맥주맥을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약량을 초과한 양은 수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장 병천)

■ 정부가 보리재배를 권장하려면 수매가격이 상인들의 매입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 큰 도움이 안돼 생산의욕을 상실, 올 해 보리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정읍군 산외면 오공리, 김 현섭)

## 2. 營農資材

### ① 비료

■ 비료판매제도도 현금과 외상판매를 병행해 실시해 주고,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해 공급하도록 했으면 한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최 종규)

■ 보리 전용 복합비료가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아 보리파종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김 태형)

■ 농토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개량제인 석회·규산질비료가 제때에 공급이 많되고 있다. 미리미리 확보해 공급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하동군 옥중면 문암리, 김 인교)

### ② 농약

■ 농약종류가 너무 많아 사용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각 농약제조회사마다 같은 용도의 농약도 농약명이 다르게 표현되어 일부 농민들은 농약명칭이 다르면 종류가 다른 농약으로 까지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이 충식)

■ 농약종류가 너무 많아 구입과 사용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약종류를 줄여 주었으면 한다.

(충남 보령군 청소면 장곡리, 박 원규)

■ 입제농약은 살포한 후 제대로 살포된 것인지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다.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농약에 색깔을 넣어 생산해 주었으면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임 종혁)

■ 농약포장지의 농약명은 그런대로 글씨가 커 읽기가 수월한데 비해 주의사항과 설명서 내용은 작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 조 동섭)

■ 수도용농약병과 포장지에 소비자가격이나 출고가격을 기재해 주고 가격도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조 평희)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 함 덕철)

■ 일부 농민들이 논 중기 제초제인 마메트(한국농약)와 초기 제초제인 마세트(미성농약)를 잘 못 사용, 3~4일 후 이양한 모가 말라 죽어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충남 서산군 근홍면 수룡리, 김 종길)

■ 공동방제용 농약을 매년 70%보조한 농약을 공급받고 있으나 물량이 부족하다.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전체면적에 살포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기 바란다. (충남 천원군 북면 사담리, 양 홍석)

### ③ 농기계

■ 농기계 및 농자재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바라고, 한편 개별농가가 부분별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도 영농기계화단지와 같은 조건으로 보조해 주기 바란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 구방1, 정 성용)

■ 기계화영농단 육성책으로 국고보조 등 지원을 하면서 농기계구입 제한 등의 규제가 많다. 지역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 개인이 농기계 구입시 기계화영농단과 같은 조건으로 완화

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진양군 진성면 하촌리, 김 형출)

■ 농촌인구 극소화, 노령화, 젊은층의 이농화 등으로 농업경영에 지장이 많다.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기계화영농이 절실하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앙기·콤바인은 연중 사용기간이 짧은 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못하는 형편이다. 농기계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농기계조성(5가구이상)시도 보조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전북 남원군 대강면 사석리, 김 귀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김 태평)

(경북 금릉군 감문면 구야, 민 병묵)

(경북 칠곡군 북삼면 율2, 최 상준)

■ 1984년도에 기계화영농단이 조직돼 콤바인·트렉타 등 각종 농기계를 4년 정도 사용해 보니 이젠 기계가 노후돼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기계화영농단에도 다시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나 일균)

■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중농 이하의 농가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농 이하의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시에는 정부보조 혜택범위를 늘려 주었으면 한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김 인교)

■ 영농기계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농기계구입비의 융자와 보조조건을 단지조성지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경북 칠곡군 북삼면 율 2, 최 상준)

■ 봉평면 창동리는 해발 5백m를 넘는 산간고냉지로서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키 위해 평창군에 문의해 보았으나 해발 3백m 이상 지역은 단지조성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영농기계화 정착을 위해서는 산간고냉지도 융

자와 보조조건을 단지 조성지와 같은 조건으로 완화되었으면 한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 3, 김 한수)

■ 현재 기계화영농단지의 구성원은 개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영농단의 운영 잘못으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도 허다하다. 기계화영농단의 구성은 보조금의 혜택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목적으로 부실단지까지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은 농민이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가격 불균형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계화단지를 철폐하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농민이면 누구든지 농기계 구입시 일률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격덕, 서 성규)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 함 덕철)

■ 영농기계화단지에 농기계구입시 50%보조는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기계가격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충남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오 영진)

■ 콤바인·이앙기는 1년에 몇 일 쓰지 않는데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 3리, 김 기표)

(전남 나주군 동강면 운산리, 김 용)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전 동주)

■ 적성면 상가리는 산간벽지로서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나 이 곳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능력이 없어 농기계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운기·동력분무기·양수기 등을 장기저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가 요망된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임 종대)

■ 영농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계화영농단지에 트랙터·콤바인·건조기·이앙기를 구입하는데 보조해 줘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원으로 이미 보급된 개량곳간이 있는데도 건조기를 포함해 구입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개량곳간이 설치된 경우 건조기를 영농단이 희망하는 기종으로 대체해 구입하도록 했으면 한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유동옥)

■ 농기계가 고의적이거나 실수로 인한 고장이 아닐 경우 구입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하자수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여을엽)

■ 기계화영농단의 보조금제를 폐지하고 지원해 주더라도 일반농민이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면 영농기계화가 앞당겨지리라 본다. (충남 천원군 동면 화계 1, 윤국섭)

■ 농기계 용자금의 금리를 5% 정도로 인하해 주기 바란다.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설화, 임광질)

■ 농촌 인력부족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기계가 꼭 필요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조확대와 농기계가격이 인하돼야 구입이 가능한데 오히려 5~10% 인상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 중원군 신니면 송암리, 이부영)

■ 얼마전에 농촌일손을 덜기 위해 국제(주)조파이昂기를 구입했다. 사용중 고장이 발생해 수리하는데 양구읍 관내의 경우 식부조취부대부품 1개에 신우단협 농기구센터는 1천원, 대동대리점은 2천8백원, 국제대리점은 3천원씩 판매해 대리점마다 가격차이가 있어 수리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생산업체는 부품가격을 고시해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 1, 전병열)

■ 농기계값이 너무 비싼것도 문제지만 값보다 더 큰 문제는 규격이 같아도 제조회사가 다르면 부품이 맞지 않아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 제조회사의 부품규격과 가격통일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각종 농기계와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가격도 비싸고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경기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박 상록)

(경기 시흥군 군포읍 부곡 1리, 박 남철)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김 동철)

#### ④ 종자

■ 감자를 주경재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매년 행정기관에 신청, 국립종자공급소를 통해 공급해 줘 재배해 왔다. 그러나 농가에서 신청한 종자가 전량공급되지 않아 감자를 파종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 3, 김 기표)

■ 정부에서 권장·보급한 일반계인 신펴벼 40kg를 신청했으나 종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0kg 정도 밖에 공급을 받지 못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한 규채)

■ 1987년 10월 초순경에 신청 공급받은 운봉벼씨 중에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앞으로 종자용은 좀더 정선하여 주기 바라며 가능하면 공급가격도 인하하여 주었으면 한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채 인석)

■ 농가에서 신청한 벼씨와 감자종자가 신청한 만큼 공급되지 않고 있어 종자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원 정선군 동면 석곡 2, 최 현규)

■ 호맥은 9월10일경까지는 파종해야 되는데 9월20일 현재까지 종자가 공급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강원 원성군 문막면 취병리, 곽 대신)

## ⑤ 기타

■ 시설원예에 필요한 농업용파이프가 생산회사 (주)연합철강의 노사분규로 인해 공급이 안되어 하우스를 설치 못해 여름철에 애써 키운 바나나·파인애플 묘목들이 고사직전에 놓여 있다.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송 두진)

■ 하우스 건조용 철재가격이(6m 규격 기준) 1986년도에 1천7백원에서 1987년도에는 1천9백원으로 ·2백원이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 비닐 등 영농자재의 검사규정을 강화시켜 품질의 질도 높여 주기 바란다.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 승만)

■ 지난 해 농협이 추하곡수매용 PP마대가격을 1개당 2백16원에 공급했으나 올 해는 24원이 오른 2백40원에 공급하고 있다. 석유를 비롯, 각종 유류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PP마대값은 인상 판매되고 있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유류값 인하폭 만큼 인하가 어렵다면 인상되기 전인 지난 해 가격으로 환원해 공급했으면 한다.

(충남 논산군 성동면 삼호리, 주 병열)

### 3. 農畜產物 價格保障

■ 성수기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 상인들이 소금·참깨·콩나물콩·녹두 등을 사재기 함으로 해서 수급이 원활치 못해 생산농가들이 대부분 출하한 후는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김 순오)

■ 특용작물인 땅콩은 특히, 연작하면 수확이 떨어지고 수박·고추·채소는 가격불안정 때문에 작목선택의 어려움으로 망서려진다. 계약재배나 가격보장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

(전북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송 한수)

■ 농산물의 식부면적의 향조사를 실시, 재배면적이 과잉시에는 파종하기 전에 통제조절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 3, 여 상노)

■ 금년은 유래없는 풍작으로 10~15%의 증수가 예상된다. 풍년속의 흉년이 되지 않도록 농촌물가에 힘써주기 바란다.

(경남 하동군 옥중면 문암리, 김 인교)

■ 청풍면 단리부락은 담배·고추·참깨 주산지로 지난 1983년까지는 부채없이 안정된 기반으로 영농에 임해 왔으나 1984년 이후 소값 하락과 농작물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농산물가격 불안정, 영농기계화에 따른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인한 영농비지출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

건축에서 영농을 해야만 했다. 각종 자금지원 보다는 안정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과 수입금지, 영농자재와' 종자대 인하 등 농민이 당국을 믿고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했으면 하다.

(충북 제원군 청풍면 단리, 장 태식)

■ 정부가 농축산물을 수매비축해 최고 시세를 형성할 때 높은 가격으로 방출, 판매한 이득금은 생산농가에 돌려 주었으면 한다.

(충남 천원군 목천면 교촌리, 장 지환)

■ 이 곳은 감자 주산지 인데도 연작피해 때문에 매년 감자와 채소를 교대로 경작하고 있다. 도암면 차항 2리는 지난 해 감자, 올 해는 채소를 재배했었다. 그러나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 거둬 영농자금 상환마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강원 평창군 도암면 차항 2, 류 재춘)

■ 농민들이 생산한 경제작물을 비롯, 각종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센타 수준의 유통기능을 가진 도매시장의 설치가 요망된다.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정 영철)

## 4. 生產基盤造成

■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사기반조성부터 해야 한다.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하고 수리시설이 안된 곳은 소류지라도 시설해 주어야 한다. (경남 합천군 가퇴면 도담리, 이 기철)

■ 이 곳은 콤바인 작업비가 경지정리가 된 논은 1마지기에 1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올 해는 날씨가 좋아 작업조건이 좋은데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1두력당 1만원에도 꺼려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전북 정읍군 김곡면 화봉리, 김 용순)

■ 콤바인 작업비가 단보당 1만 8천원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한 편 경지정리 논은 1일 콤바인이 12마지기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5마지기도 작업이 어렵다며 콤바인작업을 외면하고 있다. 경지정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논두렁 바로잡기와 합배미작업이라도 했으면 한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서 병준)

■ 양강면 미봉지구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경지정리사업이 1987년도에 착수,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농로가 높아 경운기·이앙기·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가 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영동군 양강면 미포리, 성 필준)

■ 농촌일손부족해소와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기계화영농이 이뤄되도록 경지정리를 하는데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양 기호)

■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천수담이어서 영농에 불편이 많다. 경지정리와 농수로의 설치가 요망된다.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자리, 박 달순)

■ 합배미와 논둑보수는 행정당국에서 강요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희망 농가 스스로 했으면 한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동, 조 동섬)

■ 산간벽지는 경지정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논두렁 바로잡기를 하는데 있어 경지정리와 같은 비율의 정부지원이 요망된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전영초)

■ 도농간의 소득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금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영농자재와 농기계가격 인하, 도로포장, 수리시설 확충,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이 요망된다.

(충남 부여군 양화면 내성 2, 이 달규)

■ 도시근교인 오남지구는 지난 1985년 12월경에 경지정리공사를 착공했다. 농조 및 시공자측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이 설계대로 완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공사 이전 보다 불편이 많다면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수세와 경지정리사업비의 농가 자부담을 납부치 않아 등기발급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남양주군 진건면 신월 1, 유 신섭)

■ 담배·고추 등 경제작물재배는 논·밭 관계없이 농가 스스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도록 자율적인 형태로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원성군 커래면 운암 3, 윤 덕근)

■ 농지를 임대하여 3~4년간 지력증진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지주가 토지환원을 요구해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영농종사자에게 혜택이 있도록 농지임대는 최소한 5년으로 보장해 주기 바란다.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승만)

■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사업과 소득사업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부담하여 실시했으면 한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이완산)

■ 제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는 외지 사람이 매수해 방치되고 있다. 현지 농민들이 임대하여 영농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1514, 강상근)

■ 수리안전답이 아닌 전답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대농지의 재조정이 요망된다.

(충남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조응래)

■ 상주군 농조관내 사벌지구 매토양수장농업용수개발사업을 준공했으나 용수를 공급하는 지선공사는 하지 않고 본용수공사만 해 몽리자로부터 수로에 필요한 용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경북 상주군 사벌면 덕담, 박중화)

■ 당국이 수리불안전답에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소형기계관정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혜택이 일부 농가에게만 주어지는 느낌이 든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의 확대가 요망된다. (경기 이천군 부발면 죽당리, 이서상)

■ 현재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읍·면사무소에 보관해 한해시에만 대여해 주는 것을 한해지역 주민에게 영구대여해 한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양인영)

■ 면사무소가 보관해 농가에 대여해 주는 양수기가 대부분 10여년 전에 구입,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비롯해 낡거나 관리부주의로 사용이 불가능해 교체가 시급한데도 농가로부터 1일 대여료로 3백원씩 받고 있다. 대여한 양수기를 손질해 사용하는데 하루품이 소요되기는 예사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노후화된 양수기의 교체가 어렵다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라도 해서 대여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원성군 귀래면 운남리, 윤 덕근)

■ 지난 1985년 가뭄과 한魃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풍면 중산리지역에 소류지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류지의 부실공사로 인해 둑이 두 차례나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해 수위조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수로와 용수로공사를 하지 않아 비가 조금만 올 경우도 기존수로에 물이 넘쳐 저수지 하류에 있는 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 중산리, 신 태섭)

■ 아산군 배방양수장은 집수장의 폭이 좁고 깊이도 얼마되지 않아 집수되는 용수가 적어 양수시간이 15분도 않된다. 재공사를 해서라도 가뭄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영구적인 공사를 했으면 한다.

(충남 아산군 배방면 북수 2, 성 윤모)

■ 한해대책과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과 농가 자부담으로 1988년 4월9일에 소형기계관정을 설치했으나 전기시설이 안돼 사용을 못하고 있다. (충남 논산군 노성면 화곡리, 민 신규)

■ 소형기계관정개발을 그동안 수도작에만 치중해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균등한 농촌경제발전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 주고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이용,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경기 안성군 서운면 신촌리, 이 재교)

▣ 개량곳간에 사용되는 전기는 농업용전기로 적용되도록 혜택이 요망된다.  
(충남 보령군 남포면 옥서리, 박 원규)

## 5. 營農資金 · 農家負債

■ 농협이 전년도 하반기의 대출금과 이자를 6월말까지 상환도록 하고 있는데 기일내에 영농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자금마련이 용이한 추곡수매가 끝나는 12월 말 경으로 연기해 주고 연체이자도 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강원 원성군 귀래면 운남리, 윤 덕근)

■ 농협의 일반대출자금을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말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다. 결국 매년 초 다시 대출하는 형식으로 연기만 해 농가부채가 점점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장기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강원 명주군 옥계면 현내 2, 정 의균)

■ 영농자금 및 일반신용대출을 받은 후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가산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분기별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이천군 호법면 후안 2, 김 동렬)

■ 신문 · 텔레비전 ·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농사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자면 신양리는 농사자금을 지원해 준일이 없었다. 그 용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이 강업)

■ 영농자금의 대출금리가 10%에서 8%로 인하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신용대출 금리 14.5%는 농가실정으로 보아 10%로 낮춰 주길 바라며 한편 한도액이 초과돼 신용보증을 할 경우 2인의

보증과 0.5%의 보증료도 공제하고 있는데 보증을 했을 경우는 보증료를 공제하지 않했으면 한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김 동수)

■ 단위농협 일반신용대출금 금리를 현 14.5%에서 12% 선으로 인하해 주고 2.5% 인하 채원을 농가에 다시 환원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철전리, 박 병도)

■ 농협이 영농자금을 비롯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농가는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형편이 어려운 농가일수록 농협 부채미수금 연체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자가 비싼 사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채가 갈수록 누증되고 있다.

(경남 진양군 지수면 압사리, 정 만영)

■ 각종 자금의 융자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고 장기저리의 융자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 승만)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어가가 안고 있는 부채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영농자금과 일반상호신용대출의 혜택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원성군 소초면 수암 2, 김 종학)

■ 정부가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해주었으나 일부 채무자는 지원자금은 받기만 하고 신고된 사채를 갚지 않아 부채만 누증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한다. 요즘 농어가 부채탕감이니 경감이니 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어민들은 이를 바라지 않고 모든 자금을 장기성자금으로 전환하고 이율은 5% 이하로 낮춰 주길 더욱 바라고 있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 1, 전 병열)

■ 농산물값 폭락으로 농협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하다. 농협 빚을 한데

묶어 장기상환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강 재용)

■ 단협이나 농협 군지부에서 추수 이전에 지나치게 부채상환 독촉을 하고 있다. 특히, 우편으로 내용증명이나 법원지급명령을 보증인에게까지 동일하게 보내는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

(충북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임 상균)

■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영농자재 및 각종 농기계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오히려 적계는 3백만원, 보통 5백~6백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농가부채감소를 위해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농촌실정으로 보아 영농자금을 확대 방출하면 그만큼 빚이 증가된다는 점을 감안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망된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줄리, 오 한의)

■ 정부가 농촌을 위해 영농기계화단지, 비육우사업, 영농후계자육성 등의 각종 자금을 지원해 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으나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지원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계속 누적되어 농가부채로만 남게 되었다. (경기 옹진군 영종면 운남리, 김 석호)

■ 영농자금을 비롯 각종 자금의 지원액을 늘릴수록 가전제품 구입, 관광유홍비 지출, 잡비 등으로 사용해 정비례로 농가부채가 그 만큼 증가되고 있다. (경북 월성군 산내면 의곡 1, 김 상기)

■ 농가부채의 탕감보다는 현재 농민이 지고 있는 농협 채무액을 10~15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잡고 장기저리로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김 용선)

■ 농가부채탕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추곡수매로 수매대금을 받은 대다수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갚으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해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채탕감이라는 논의가 있으면서부터 상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조 한현)

(전북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김 성규)

■ 저희 마을은 부채가 평균 5백만원 정도 육박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채는 무이자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장기저리로 전환해 주었으면 한다.(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김 동철)

(경남 진양군 정촌면 관봉리, 정 재관)

■ 농협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인하와 장기분할 상환이 절실하며, 각종 자금대출전에 농협이 사업계획이나 신용도조사를 철저히 조사한 후 대출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윤 인현)

## 6. 農村社會 · 營農後繼者

■ 단위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총대 가운데 과반수만 확보되면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대선거 때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행해지고 있다. 단위조합장의 각종 급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의의 여론이고 보면 급여를 감액하든지 명예직으로 했으면 한다.

(경기 이천군 부발면 산촌리, 조 양원)

■ 단위농협, 축협, 농조, 협연초, 산림조합장 등 각종 단체의 장은 구성원인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하루 빨리 개정되었으면 한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송 은섭)

(전남 강진군 신전면 신초리, 양 원일)

■ 각종 포장지, 비닐봉지, 빈병, 깡통 등 수많은 폐기물들이 농촌의 구석구석에 버려져 쌓이고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이다. 환경 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경남 김해군 주촌면 천곡리, 한 태희)

■ 자연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활동이 시들해져 폐비닐 등이 마을어귀와 밭두렁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안 영만)

■ 한국자원재생공사가 1987년부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빈병을 1개당 30원씩 수거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 지역은 한번

도 수거하지 않아 당초의 계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이 보석)

■ 전답의 폐비닐을 비닐제조공장에서 단체를 구성해 수거해 갔으면 한다.

(전남 화순군 북면 이천리, 나 종주)

■ 농촌하천이 점차 오염되고 있다. 하천감시원을 각 면당 4~5명씩 두어 하천오염을 방지했으면 한다.

(경남 함안군 여항면 평암리, 홍현표)

■ 소흘면 영농후계자 상당수가 영농에 실패해 도시로 나갔거나 아니면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에 편중함으로써 40~50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후계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이 종영)

■ 1982년도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배 50만원을 지원받아 1986~87년 2년간 상환해야 하는 분할상환금 3백 25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고심하던 중 정부의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자금을 미상환금액까지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연기해 준다는 통보와 함께 1988년 3월30일까지 군 지부에 연기혜택 절차를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20여일 후에 2년동안 미불된 할부 원금을 상환해야 나머지 금액을 연기혜택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할부원금의 이자만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자금의 배정이 요망된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6, 박 종옥)

■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주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농어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요구된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용명산)

■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을 상환연기 한다는 내용이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선정되는 후계자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 자금지원을 받은 후계자에게도 자금상환 연기혜택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한편 농지구입자금 지원도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혜택범위가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한다.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전 병열)

## 7. 農地稅 · 農地購入資金

■ 농지세 기초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공제외에 가족수·교육비 등을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 이점술)

■ 정부의 투기억제대책 방안으로 1988년 10월부터 토지매매시 관인계 약서를 의무화해 농민들이 자녀결혼비, 교육비의 마련을 위해 부득히 처분해야 할 때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 공주군 장기면 평기리, 한 광석)

■ 농민들간에 농지매매시는 가능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신고제, 허가제를 철회했으면 한다.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김 대운)

■ 황산면 옥동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해 9월말경부터 서울의 부유층들이 임야를 평당 7백원~1천5백원, 농토로 활용하는 밭은 4천5백원~1만5천원에 사들이고 있다. 특히, 임야의 경우는 농토 개간이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김 용선)

■ 농지임대차관리법 발표 이후 농지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평당가격도 발표 전에 8천원에 거래되던 것이 1천원이 하락된 7천원선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매매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경남 함안군 함안읍 봉성리, 송재준)

■ 부발면 삼촌리의 경우 산 95%, 밭 40%, 논 30% 정도가 도시자본가가 소유해 1970년대부터는 토지거래도 농민이 아닌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 이천군 부발면 산촌리, 조 양원)

■ 농지구입자금 지원과 선정에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가 되었으면 한다. 즉, 구입시 일정 평수를 정해(예 1천~1천5백평) 그 지역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전액지원, 수혜대상선정은 중농가를 포함시키고, 연령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응자지원금리도 연 2~3%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 (전남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 정 영일)

■ 농지구입자금의 대상자를 좀더 확대해 주기 바라며, 선정도 40~50대가 영농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면 한다. (경기 이천군 호법면 후안 2, 김 동렬)

■ 이웃농가에 따르면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자는 많고 지원액이 적어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지원액을 확대해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 2, 임 종혁)

■ 영세농가의 농지구입을 위해 연리 5%의 농지구입자금 7백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이 지역의 논값은 평당 1만5천원~2만원선으로 3백50평~4백70여평 밖에 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오 우영)

■ 농지구입자금 선정기준이 현행 여건으로 보아 영농후계자를 비롯, 나이가 젊은 영세농에게 너무 유리하게 배정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배점기준 면에서도 실제 40~50대가 영농경험이 풍부한데도 영농후계자에게 높은 배점을 부과해 책정되고 있으며, 영농규모도 1.5정보 미만인 영세농가로만 규정되어 있다. 중농 정도까지 혜택범위를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전북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김 성규)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노 상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박 정훈)

■ 농지구입자금 수혜인원이 1개 마을에 1~2명으로 한정된 데다 대상 농가당 평균 5~6배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농지를 구입,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류 재현)

■ 현재 농지구입자금의 수혜대상자를 각 리·동별로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인원과 용자금액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 4, 김 동옥)

■ 농지구입자금의 균등지원과 지원금도 7배~1천만원 정도로 확대 지원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 1, 전 병열)

■ 농지구입시 평당 가격차이로 금액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을 지역여건에 맞게 사전조사 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경북 월성군 양북면 용당, 권 영환)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줄 농민들은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대상자가 대부분 부락리장과 유지들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자금도 일시에 집중방출되다 보니 농지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최 종규)

■ 농지구입자금은 경작규모와 신용도를 고려,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김 예상)

■ 서울 등지에서 와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농민은 농지를 살수가 없다. 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실제 영

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구입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경기 포천군 화현면 화현 2, 송 호철)

▣ 도시자본가의 농지구입 억제와 부동산 투기방지 등의 각종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김 종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이 완산)

▣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 김 한수)

## 8. 畜 产

■ 지난 83·84년 소파동 당시 암송아지 1마리가 1백20~1백40만원, 수송아지는 80~90만원, 한우는 4백kg 짜리가 1백80~2백30만원 할 때 식육점 쇠고기 1근(6백g)에 4천3백원이었고, 시장 생체값이 kg당 4천1백원 했을 때도 쇠고기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다. 1988년 10월초 현재 암송아지는 50~70만원, 수송아지는 70~90만원인데 시장 생체값은 kg당 3천8백원, 식육점 쇠고기값은 근당(6백g)에 5천1백원으로 폭리를 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격연동제가 절실히 요망된다.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삼전리, 유 익선)

■ 1984년에 도입된 송아지를 1마리에 1백여만원에 구입, 사육했으나 그나마 80% 정도는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했는 데다 그 이후로 소값마저 하락하여 대부분의 사육농가는 수십만원씩의 적자를 보았다. 소값상환율 5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한다.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이 강업)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정 연자)

■ 1983년 도입육우입식자금과 1984년 한우입식자금을 그동안 소값하락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해 부채가 누적되었다. 입식자금 상환율 10년 정도 연기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촌리, 김 유곤)

■ 정부차원에서 쇠고기수입이 절실하다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육우출하시 장려금 지급, 지육가격과 배합사료가격 인하, 세금감면혜택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경기 이천군 이천읍 율현리, 구 창회)

■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수입창구를 축협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축산진흥기금의 적립형태가 아니라 사료가격의 인하, 축산기자재구입자금의 지원 등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겸승리, 정 권)

■ 현재 유지방 함량 3.4% 기준의 원유 kg당 3백22원은 지난 1985년 5월에 조정한 것으로 그동안 사료값은 10~12%, 기자재를 비롯한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25%정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김 종진)

■ 당국에서 1987년 10월부터 돼지수매를 했을 때는 다소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그 이후로 내림세를 보여 1988년 11월 초순 현재 90kg(규격돈) 짜리 산지가격이 8만여원으로 떨어지고 있어 가격안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물리, 이 상학)

■ 돼지 생체값이 산지에서의 kg당 1천원은 생산원가에 밀들고 있다. 그러나 정육점의 식육값은 3천3백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모두의 보호측면에서 가격연동제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충남 천원군 목천면 교촌리, 장지환)

■ 축산물 수입정책에 있어서도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금지, 한우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 마련, 재벌의 축산업 참여 억제, 쇠고기 수입시 전량 포장가공판매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

(전남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 정 영일)

■ 축사의 가축분뇨가 배수로로 통해 하천으로 마구 흘러 식수오염은

물론 각종 농작물에 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가축폐수 처리장의 설치를 의무화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 주었으면 한다.

(경북 청도군 매천면 북지, 주 석희)

■ 매년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실효성이 없다. 한우와 젖소를 다량으로 사육할 경우 정부가 권장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재배해 조사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1~2두 사육농가는 사료작물 재배를 꺼리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종자대)을 정보당 2만7천2백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축산 농가(1~2두)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 국한된 실정이다. 앞으로는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가 현물인 종자로 직접 공급해 주길 바란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강 태식)

■ 요즈음 계란이 과잉생산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1988년 3월부터 사료값이 포대당 3백40원이 인상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정생산비인 1개당 70원 정도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김 태일)

■ 소·돼지·닭 등의 경우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끼(식용·털실용 앙고라)는 곳곳에서 출혈성 폐렴병으로 폐사가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사된 토끼는 묻고 소각시켰으나 일부 사육농가는 식용으로 시중에 유출하였다고 한다. 토끼의 경우도 법정전염병으로 포함시켜 주고, 방역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원성군 문막면 취병리, 곽 대신)

## 9. 林業

■ 덕산면 신척·한천·합목리 일대 야산이 보안림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해결되도록 타당성을 조사해 산림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조 평희)

■ 농촌에 임산원료를 채취할 인력이 없어 산림이 방치되고 있다. 한편 영세산주로서는 산림을 이용, 경영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국가나 자본가들이 이를 매수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돋고, 산림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산주가 자기 산을 이용할 때는 소유권을 인정해서 자기소유 산의 목재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과수 등을 심을 수 있게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법을 폐지시키고, 도별법만 적용했으면 한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전 영초)

## 10. 農村福祉·文化施設

■ 농어촌지역도 자동전화로 바뀌어 편리해 졌으나 전화가 없는 농가는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에 자동공중전화를 설치해 주었으면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2, 임 종혁)

■ 농어촌전화의 전화세를 폐지하고 통화도수에 의한 누진요율을 적용하기 바란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유 윤근)

■ 지방도시와 유원지 등은 교통 및 도로사정이 좋은데 반해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크게 뒤져 있어 농산물 수송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로포장 및 확장이 절실히 요망된다.

(경북 문경군 호계면 부곡, 박 상대)

■ 농어촌의료보험 국고보조율과 진료구역도 동일한 수준으로 해주고, 수납방법도 월별, 분기별, 반년납별 등으로 희망에 따라 납부했으면 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올해부터 농어촌지역까지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모두가 잘된 일이라고 환영하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대부분 농민들은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보니 너무나 많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증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빚었다. 저희 마을만 보더라도 평균 7천원에서 1만원 이상도 있었으며 본인의 경우는 가족수는 7인으로 소득은 11등급, 재산도 11등

급으로 보험료가 1만6천6백원이 부과되었다. 농어촌의료보험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높혀주고 진료도 원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죽림리, 양 해술)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겸승리, 정 권)

■ 농어민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세대당 가족수, 재산,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데다 국고보조도 낮다. 보험료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 구방1, 정 성용)

■ 농어촌의료보험료가 재산세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직장근로자와 같이 재산세액을 제외시켜 주던가 아니면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를 50% 정도로 낮춰주기 바란다. (경기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조 성진)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박 종석)

■ 농어촌의 의료보험료가 소득, 재산가액, 가족수에 비례하여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세분해 최저 1천7백여원에서 최고 3만여원 정도까지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이고, 수납방법도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는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김 태일)  
(충남 서산군 조홍면 두야리, 최 우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김 재일)  
(전남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이 승언)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문 길선)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임 영수)

■ 금년부터 시작된 농어촌의료보험을 위하여 당국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재 농어촌 중산층 이상 농어가라 할지라도 월 1만원 이상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농어민을 위한다면

의료보험료를 현재 수준보다 낮춰 주던가 지원액을 높혀 주었으면 한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당호, 고 영환)

■ 정부가 올해부터 농어민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해 줘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절면 황벌리는 산간지역으로서 연평균 호당 소득은 2~3백만원 정도이나 의료보험 책정은 가구당 8천~2만원 선으로 책정되어 너무 무거운 부담이다.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된 의료보험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전북 남원군 보절면 황벌리, 장 진석)

■ 농어촌의료보험에 대비 확충키로 한 의료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농어촌의료보험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본다. 한편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농어민도 아무 병·의원에서 공직자와 똑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경기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안 필봉)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2, 심 경보)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1, 전 병열)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안 영만)

■ 농어촌의료보험료의 부담이 과다하니 60~70%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

(충북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임 상균)

■ 현재 농촌실정으로 보아 1만8천~2만5천원 하는 농어민의 의료보험료는 너무 부담이 크다.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수가를 공직자 수준으로 낮춰 주고, 의료시설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전북 익산군 춘포면 용연리, 최 종만)

(경남 진양군 지수면 압사리, 정 만영)

■ 의료보험료가 월 1만여원의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를 현재

까지 한번도 납부치 않고 거부했었다. 9월30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재산 압류한다는 독촉장이 발부되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한다.

(경북 안동군 예안면 정산2, 최 동균)

■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의료보험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번기만이라도 의료보험 조합지구의 담당자가 농가를 순회해 징수해 갔으면 한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 조 동섬)

## 11. 農畜產物 輸入

▣ 호도수입으로 값이 떨어져 호도생산농가의 피해가 크다. 호도의 수입을 하지 말고 수확기에 1밀에 2만5천~3만원선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 (충남 천원군 광덕면 원덕리, 김 상용)

▣ 농축수산물 수입품목을 결정할 때는 농민이 참가한 협의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면 한다. (충북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임 상균)

▣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당국이 농축산물의 경우 과소생산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 미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 후로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게 주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농민들을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내생산으로 대치하고 정부차원에서 부득이 수입을 해야 한다면 수입에 따른 이득금은 생산농가에 환원해 주었으면 한다.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삼전리, 유 익선)

▣ 엽연초생산농가는 양담배수입으로 고추로 전환했으나 면적확대와 풍작으로 인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게 밀돌았으며, 참깨·땅콩도 수입해 가격하락으로 농촌정책의 꿈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안정된 소득원을 개발해 주던가 수입을 억제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당국에서 힘써 주었으면 한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이 덕의)

▣ 올해 감자작황이 좋아 당시 시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가격면에서 생

산원가를 제외하더라도 그런대로 농가의 소득향상은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나 냉동감자의 수입으로 생산농민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농가의 가격보장과 생산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수입은 억제돼야 한다.

(강원 정선군 동면 석곡2, 최 현규)

■ 최근 수입자유화 조치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교역으로 중국산 대추·표고버섯 등이 다량 수입되면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소득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협과 농촌지도소의 권장으로 투자한 신규재배농가는 피해가 크다. 대추·표고버섯 등도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대치시켜 주고, 농산물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경북 월성군 산내면 의곡164-11, 김 상기)

(경북 상주군 공선면 산현4, 이 준호)

■ 참깨와 약초인 황기를 재배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약도매상에 의하면 올해 황기를 대략 40만톤 정도 수입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2, 최 정호)

■ 참깨증산자금방출 보다는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억제가 더 절실하다.  
(충남 천원군 동면 화계1, 윤 국섭)

## 12. 特作 · 蟻業

■ 이 지역 농협의 고추수매 배정량이 단보당 26kg으로 생산량에 비해 크게 부족, 6백 g 근당 1천~1천3백원의 혈값으로 시중출하 했었다. 고추 파종 전에 다음 해의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예시해 주길 바란다.

(경기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 장 태수)

■ 영월지역은 고추수매 배정량을 농가당 2백근 미만으로 제한수매를 실시해 생산량에 비해 수매량이 부족, 6백 g 근당 상품 1천1백원, 중·하품은 생산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1천원에 출하하고 있다.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1, 정 희옥)

■ 고추시세가 형편없이 하락 했을 때 고추수매를 하지 말고 생산실정에 맞는 가격을 미리 예시해 계획수매를 하면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다. 농민이 희망하는 양의 80% 정도는 수매해 주기 바란다.

(충남 천원군 북면 사담리, 양 흥석)

■ 농협이 6백 g 당 2천원에 수매하고 있는데 고추수매량이 적은 것을 알고 상인들은 1천2백~1천5백원에 사가고 있다. 수매량을 추가 배정해 주기 바란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장 병천)

(경북 영양군 길원면 주곡, 조 석환)

■ 올해 고추 재배면적의 확대와 풍작으로 인해 과잉생산되어 대부분 농가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2백 kg 정도 고추를 생산했지만 수매배

정량은 20kg으로 생산량에 비해 크게 부족, 6백 g 근당 1천5백원의 혈값에 시장출하했다. (충남 청양군 청남면 가곡리, 김홍)

■ 농협이 고추수매를 3차례 걸쳐 1회에 호당 15~30kg으로 제한, 1차 9월, 2차 10월, 3차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수확기와 일손이 겹치고 있다. 그리고 고추수매량이 크게 부족해 산지에서 6백 g 근당 1천2백~1천5백원의 수매가격보다 낮은 값에 출하했었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관마리, 설남신)

■ 고추수매량이 크게 부족, 안계시장에 10월11일 수매가격보다 6백 g 근당 9백원이 낮은 1천1백원에 출하했었다. 수매가격인 2천원선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매량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 김태수)

■ 정부가 13만톤 이상의 고추생산물량을 파악하고도 농협의 고추수매물량이 2만톤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수매인가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수매가 시작된 후 고추가격은 절반 정도로 떨어져 생산비는커녕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잉생산이 어찌 농민들만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리고도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라고 생각하는가.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 김용구)

■ 정부의 고추수매에 있어 너무 성급한 가격결정과 수매물량의 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고추수매가격을 6백 g (1근)에 2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농약대, 자재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이 못되었으며, 수매물량도 저희 지역은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중간수집상들의 농간으로 현재 6백 g (1근) 상품은 1천2백~1천5백원 정도의 혈값에 방매해야만 했다.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1리, 이계승)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김응만)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김 예상)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2, 심 경보)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 이 점술)

■ 전국적인 고추풍작으로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을 막기위해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정된 수매량이 생산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수매 가격보다는 수매량을 확대해 주길 요청했다.

(경북 군위군 효경면 증구2, 이 제화)

■ 지난 해에 참깨값이 산지에서 6kg(1말)에 5만원선에 거래 되던 것이 수입이 확대되면서 요즘 3만원 정도로 떨어져 생산의욕을 잃은 농촌 젊은이가 점차 도시로 나가 영농후계자 육성마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충북 보은군 화북면 건천리, 윤 창호)

■ 고추·마늘·참깨 등 경제작물의 경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듯 하면 수입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체작물이 없어 과잉생산이 가격파동으로 이어져 생산비도 전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 가격을 예시해 수매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1, 정 희옥)

(경북 안동군 길안면 백자, 성 대현)

■ 당국의 담배수입결정에 의해 기존 잎담배경작농가가 고추·참깨 등의 작물로 대체함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된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정 권)

■ 잠견가를 50% 정도의 큰 폭으로 인상하면 자연적으로 잠업농가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 수입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대체 될수 있을 것이다.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송 우용)

■ 1988년 봄에 북면은 화순군으로부터 뽕나무 묘목이 2만주가 배정, 각 부락단위로 배정되어 저희부락은 61호에 5백주(농가부담 40%, 정부 보조 60%)로 1주당 농가부담이 51원30전이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 데도 배정돼 심기를 기피한 농가는 묘목을 마을창고에 그대로 방치해 말라 죽고 말았다. (전남 화순군 북면 이천리, 나 종주)

## 13. 農工團地

■ 농공지구 건설정책은 일부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농민을 위한 혜택은 별로 없다. 농민들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정 환기)

■ 정부가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공정책을 시행,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공장이 건설된다 하여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 짓고 농한기에는 공장에서 일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 농공단지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주기 바란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양 기호)

■ 농촌의 결혼적령기 청소년들이 결혼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진출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농을 막고 귀농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조성해 농촌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웅진군 영종면 운남리, 김 석호)

## 14. 農漁家放送 · 營農教育

■ 방송이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농축산물시세 동향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격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김 인교)

■ 가뭄·우박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있었는 데도 예년 보다 농산물의 작황이 좋다는 내용이 각종 매체를 통해 잘못 전달돼 결국 가격하락 현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농가의 보호측면에서 고추 등 경제작물이 재배면적 확대와 풍작으로 인해 과잉생산시에는 당국에서 적정가격으로 수매비축해 가격이 불균형할 때 이를 방출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책이 요망된다.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1리, 이 계승)

■ 1988년 10월 초순 현재 농민신문의 농산물시세(가축)란을 보면 양고라 토끼가격이 6개월 이내 1만5천원, 8개월 이상 3만원 정도로 게재돼 있으나 현재 산지가격은 1천5백~2천원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이 표기돼 있다.

(강원 원성군 문막면 취병리, 곽 대신)

■ 농번기만이라도 일기예보 방송을 좀더 자주해 주었으면 한다.

(충남 아산군 배방면 북수2, 성 윤모)

■ 텔레비전 시청료 월 2천5백원은 현농촌실정으로 너무 비싸니 월 5백

원 정도로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이천군 부발면 죽당리, 이 서상)

■ 면단위의 행정기관마다 유사한 담당부서가 많고 중복되어 재원낭비가 되고 있으니 영농지도만이라도 면사무소, 농촌지도소지소, 단위농협 등을 일원화시켜 주기 바란다.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 승만)

## 15. 農業 및 각종 災害保險

■ 인제·양구·평창·정선 등 산간고지대의 경우 지난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영동지방으로부터 불어 닥친 강한 샛바람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출수기에 접어든 벼가 수정이 안되는 등 벼생육에 지장을 받아 60~80% 정도가 냉해피해를 입었다. 산간고지대에 적합하고 냉해에 강한 볍씨의 개발·보급과 피해농가가 산간 일부지역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어 사기를 높여 주었으면 한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1, 채 인석)

■ 원북면 방갈리는 서산군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간척지가 많은 척박한 농토로 매년 한발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돼 모 이앙이 늦어 30% 감수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큰 피해가 아니면 전혀 보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로는 냉해지역은 영농자금 상환연기 혜택이 있다는데 한해도 연기혜택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충남 서산군 원북면 방갈리, 박 상익)

■ 지난 해 셀마와 다이너 태풍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다. 그러나 준용하천이라는 이유로 피해복구시 지방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복구 사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농토구입비 역시 30% 정도의 지원에 그쳤다.

(경북 월성군 양북면 용당, 권 영환)

■ 농협이 공급한 종자로 계약재배한 찰벼가 1/3정도나 결실을 맺지 못

하는 피해를 입었다. 배상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설화, 임 광질)

■ 고냉지 지대로 출수기에 이상저온현상으로 벼가 여물지 않고 쪽정벼  
가 많이 발생, 수확이 크게 줄었다. 당국이 벼 수확시 냉해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천1, 전 병열)

■ 농기계 사용 부주의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해를 입었  
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정 동연)

## 16. 其他

▣ 몇 년전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줘 1970년도 이전 것은 대부분 정리를 했으나 그 이후로는 일부 농민은 농토를 매수하고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농가가 있다. 토지를 매수 후 계속 영농할 경우 상속이나 매도인이 없어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도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의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유 윤근)

▣ 아직도 농촌에는 부모전대부터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해 온 농지가 있다. 지난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미처 이전등기를 내지 못한 농지를 이제 등기이전 하려하니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소유자가 행방불명·사망의 경우도 있고 자손들 역시에서 생활해 이전서류를 갖추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토지이전등기의 특별조치법을 재차 마련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미등기의 농지를 모두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송 규섭)

▣ 농촌주택자금의 이율 연8%를 3%선 이하로 낮추어 주었으면 한다. 한편 토지용역비를 연 10%에서 5%로 낮춘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 전문가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공청회)을 종합하여 생산비원가 조사를 실시, 재조정 했으면 한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권 두상)

■ 도시에서 공부하는 농촌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경북 영양군 길월면 주곡리, 조 석환)

(경남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정 용권)

■ 농축수산물의 가공·제조를 농민이나 농협이 전담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농민이 되돌려 받도록 했으면 한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 함 덕철)

■ 리·동장의 보수가 업무에 비해 처우가 너무 낮은 편이다.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재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조 평희)

■ 상장주식 공모주를 단위농협에서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공모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농민에게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양 영만)

■ 기홍읍에도 농토가 구획정리지구로 매몰하여 변하고 또는 공장 등으로 50여정보가 지목이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통계상으로는 전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농토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경기 용인군 기홍읍 공세리, 이 기조)

■ 현재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읍면지소가 군지도소로 합병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면단위에는 직원이 적어서 농민들이 기술지도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군지도소로 합병치 말고 그대로 지소를 두어 직원만 충원해 기술지도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장 병천)

■ 단위농협의 지역금융점포가 온라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타지역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도 없어 통장분실시 피해를 입고 있다. 송금과 입출금이 자유롭게 전산 온라인 설치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으면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2, 임 종혁)

■ 농촌생활이 고단하고 소득이 적어 농촌총각과 결혼하려는 처녀가 나서지 않고 있다. 농촌후계자 또는 농촌을 지키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 처녀에게는 정착금 또는 혼수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성2, 김 월련)

■ 농촌일손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산간지역까지 각종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과중한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유류까지 혜택을 배려해 주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취급을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지정된 지역 주유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생산권지역 외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취급소는 물론 일반 주유소에서도 카드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윤 석봉)

■ 대부분의 농민들은 매년 추곡수매시 종자를 제외하고는 전량수매에 응하고 교환양곡을 기다리는 영세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늦어도 4월까지는 공급돼야 할 교환양곡이 작년에는 6월에 공급되더니 금년에는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아 영세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 중원군 소태면 오량리, 김 익수)

■ 1987년도부터 육묘장은 을류, 벌크는 병류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개월 사용하고 휴지(休止)신청을 한전에 하면 2개월 분의 기본요금 고지서가 나온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2개월분의 기본요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한전측에 문의 하였더니 한전측은 전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영수증 수납고지서 3개월분이 납입돼야 법규상 휴지신

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농업용전기를 갑·을·병으로 구분한 것과 사용하지도 않은 2개월분의 전기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법은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농업용 전기사용구분과 전기요금 납부에 관한 법을 개정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줄리, 오 환의)

■ 농산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농지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부면적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농산물통계가 불확실하게 집계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북하리, 김 태성)

■ 올해 농촌품삯이 지난 해보다 크게 올라 1인당 1일 1만3천~2만원씩 해도 구하기 힘들고 품귀현상까지 빚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시흥군 군포읍 부곡1, 박 남철)

■ 이미 착수된 간척지 어업권 보상은 현재의 간척지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서 실시되었으면 한다. (전남 고흥군 도양면 오마리, 양 정희)

■ 동력분무기도 예년까지만 해도 면세유(휘발유)를 받고 카드까지 발급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중단되었다. 면세유 혜택범위를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전북 남원군 주생면 영천리, 방 규태)

■ 강천면도 농공단지조성과 농업재해보험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곽 순옥)

## &lt;附錄 1&gt;

## 「現地通信員」分布別 現況

1988. 12末 現在

## ○ 道 別

구 분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인원수(명)	281	139	166	279	239	401	391	362	59	2,317
구성비(%)	12.1	6.0	7.2	12.0	10.3	17.3	16.9	15.6	2.5	100.0

## ○ 年齢別

구 분	20代	30代	40代	50~60代	計
인원수(명)	217	449	755	896	2,317
구성비(%)	9.4	19.4	32.6	38.7	100.0

## ○ 學歷別

구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인원수(명)	338	884	969	126	2,317
구성비(%)	14.6	38.2	41.8	5.4	100.0

## ○ 耕地規模別

구 分	零細農	小 農	中 農	大 農	計
인원수(명)	62	737	955	563	2,317
구성비(%)	2.7	31.8	41.2	24.3	100.0

D18-13

## 1988年度 農民이 바라는 農政

---

1989年 1月

發行人 金 筵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記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